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

| 일시 : 2023. 6.29.(목) 14:30 ~ 6.30.(금) 13:00

| 장소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

| 일시 : 2023. 6.29.(목) 14:30 ~ 6.30.(금) 13:00

| 장소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일 정 : 2023. 6. 29.(목) 14:00 ~ 6. 30.(금) 13:00, 1박2일

◆ 장 소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주 제 :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

◆ 프로그램 일정

6. 29. (목)		
시 간(분)		내 용
14:00~14:30	30'	등 록
14:30~15:00	30'	• 개회사 • 신임 총장 소개 • 임시총회
15:00~16:20	80'	[주제]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 - 발제 : 이성권 경제부시장(부산광역시) - 토론 · 수도권 : 홍성태 총장(상명대학교, 서울총장포럼 회장) · 비수도권 : 정성택 총장(전남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7개권역총장협의회 회장) · 국립 : 차정인 총장(부산대학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 사립 : 황윤원 총장(중원대학교, 충북지역총장협의회 회장)
16:20~16:40	20'	[발표] 대학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 박구병 이사장(한국교육시설안전원)
16:40~16:50	10'	휴 식
16:50~18:00	70'	[교육부와의 대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대학규제혁신국 참여) - 대학 재정 / 대학 평가 / 대학규제 개선 방안
18:00~19:00	60'	만찬

6. 30. (금)		
시 간(분)		내 용
09:30~10:30	60'	기능별 총장협의회 논의
10:30~11:30	60'	지역별 총장협의회 논의
11:30~13:00	90'	오찬 및 폐회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3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부산에서 총장님들을 모시고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우리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OECD 수준 확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고등교육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①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 규모를 올해 9조7천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 가량 추가 확보하여 전입할 것과 ②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 2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자율경비 비율을 확대할 것과 ③「글로벌대학30」 예산을 내년에 타 사업과 별도로 편성·확보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①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 ②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③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④수익용토지 분리와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지역대학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대학지원TF’를 발족(2023.6.20.)하였습니다. TF를 통해 소규모대학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월 중 교육부, 국회 등에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대학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의 대학-지자체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가 잘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대학-지역혁신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에서는 RISE, 글로컬 대학 등에 대한 정책 진단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번 하계대학총장세미나는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을 전망하고, 대학이 준비할 과제를 숙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의 발제를 바탕으로 지역별, 설립유형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형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대교협 회장으로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적극 후원해 주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과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부산광역시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흔쾌히 토론을 수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홍성태 상명대 총장님, 정성택 전남대 총장님, 차정인 부산대 총장님, 황윤원 중원대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장 제 국**

CONTENTS

I.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 1

[발제] 이성권 경제부시장(부산광역시) 3

[토론] 13

- 〈토론 1〉 홍성태 총장(상명대학교) 15

- 〈토론 2〉 정성택 총장(전남대학교) 18

- 〈토론 3〉 차정인 총장(부산대학교) 23

- 〈토론 4〉 황윤원 총장(중원대학교) 26

II. 대학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33

- 박구병 이사장(한국교육시설안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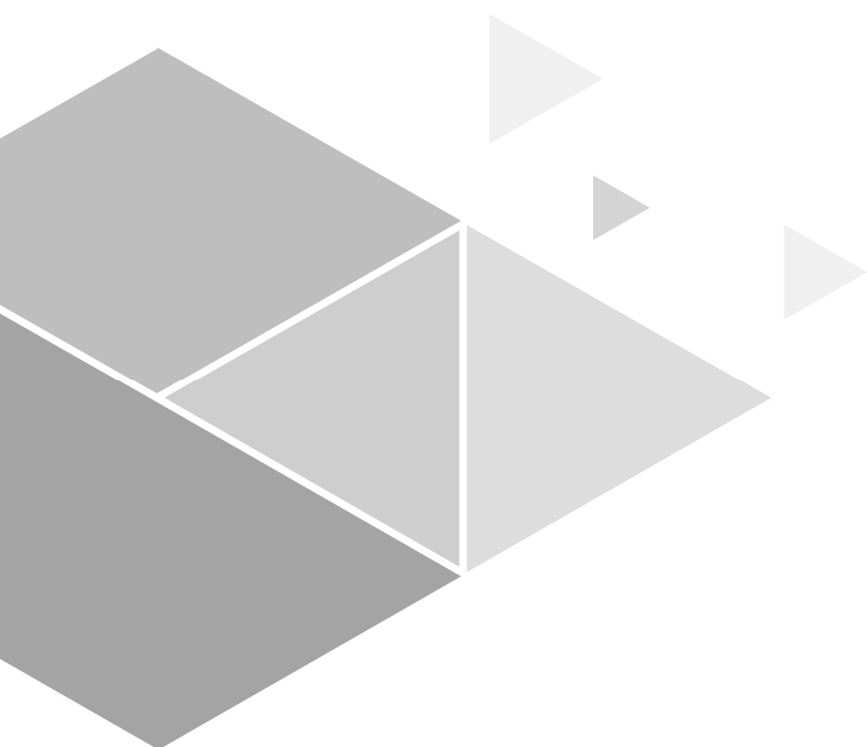
I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



[발 제]

이 성 권 경제부시장 (부산광역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선진도시



아일랜드 더블린



덴마크 코펜하겐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따뜻한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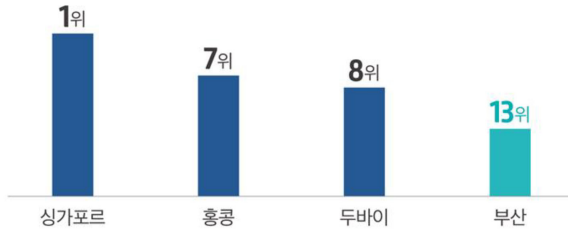
개인의 행복

배움과 자아실현

도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 삶의 질 지수 (mercer 선정, 2019년)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도약”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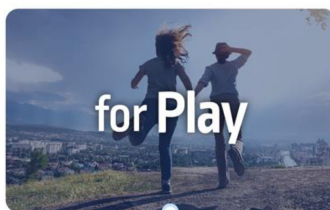
Busan Is Good



한국기업평가연구소 선정
도시브랜드 평판 **전국1위**

고용노동부 선정
워라벨 **전국1위**

국회미래연구원 선정
한국인의 행복조사
특광역시 1위



세계최고의 여행지
내셔널지오그래픽 선정
2023년 세계최고의 여행지 25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도시
BTS콘서트 **6만명**
불꽃축제 **70만명**

세계적 위케이션 도시
휴양과 비즈니스
강점을 모두 가진 도시



세계스마트 도시평가 (SCI)
세계 62위 → 22위
(대한민국 1위)

21개 대학 소재
매년 **4.5만명** 졸업생 배출
우수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2022년 한해 역대 최대 투자유치
3조원 규모 투자유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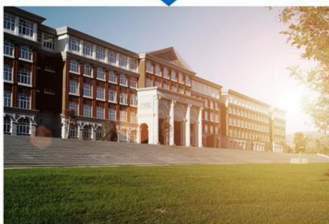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지산학 협력 도시, 부산

○ 지산학 협력하기 좋은 도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22개 대학



정부연구개발사업
시도 대학별 유치실적 전국 4위
(2021년 기준, BISTEP)

뛰어난 역량을 갖춘 많은 인재



22개 대학에서 매년 4.5만명
우수인재 배출

혁신을 원하는 지역 기업 다



산학협력에 대한
기업의 높은 참여 의지 보유

“지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강점 보유”

지산학 협력 도시, 부산

○ 그간 지산학 협력을 위해



◆ 대학 대상 정부 공모사업 최대 유치 (2022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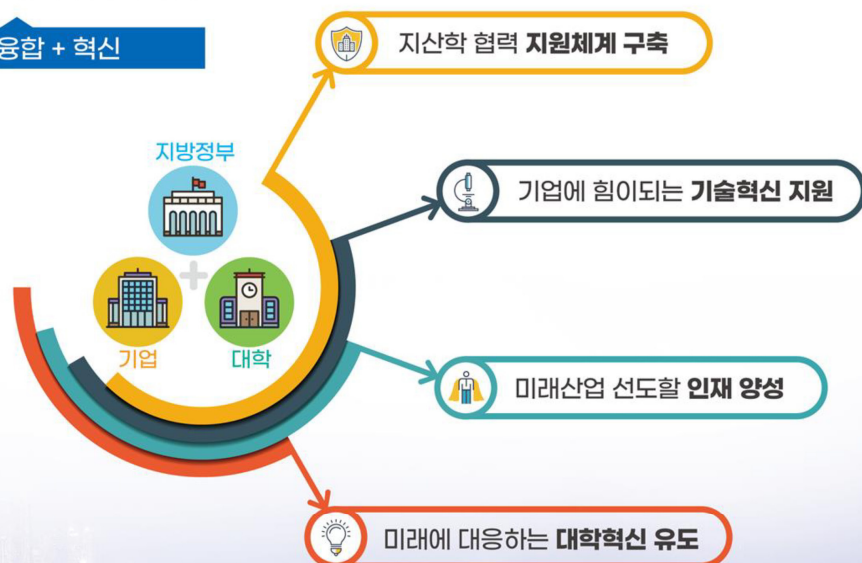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LINC 3.0(14개 대학), 창업중심대학(부산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부경대학교) 등 정부 공모사업 역대 최대 선정

07

지산학 협력 도시, 부산

○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정책

연결 + 융합 + 혁신



08

지산학 협력 도시, 부산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추진방향

01. 긴밀한 연결



02. 기술혁신 지원



09

지산학 협력 도시, 부산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추진방향

03. 미래인재 양성



04. 대학혁신 유도



“ 지산학협력 활성화로 사람-기업-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 ”

10



MEMO

MEMO

[토론]

〈토론 1〉 홍 성 태 총장 (상명대학교, 서울총장포럼 회장)

〈토론 2〉 정 성 택 총장 (전남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7개권역총장협의회 회장)

〈토론 3〉 차 정 인 총장 (부산대학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토론 4〉 황 윤 원 총장 (중원대학교, 충북지역총장협의회 회장)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대안 (지산학 협력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

부산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선진도시로 도시발전의 목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도시이고, 부산 삶의 질이 아시아에서 13위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아시아 10대 행복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세계 2위 환적항, 세계 7위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진 지정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도시이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21개의 대학이 매년 45,000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살려 물류, 금융, 디지털 신산업,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으로 양성하여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대학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기능인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로 지역사회 기여해야 함. 또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이 지역산업에 투입됨으로써 인구의 정착에도 기여하는 것이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선순환 체계가 이어져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양성한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산업에 취·창업하여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데, 현재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문제가 구조화, 고정화되어가고 있으므로, 대학의 지역인재가 지역산업에 투입되는 연결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대학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수밖에 없음.

그래서 부산의 대학-지자체 협력 모델이 글로벌대학과 RISE의 선도적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 주도의 추진체계가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부산의 지산학 모델은 단순 조력자의 역할에서 산학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으며, 정부는 기업과 대학을 연결 및 중개하고 지원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기업은 우수 지역인재에 대해 채용 후 정주를 도모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은 대학이 혁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부산의 지산학 추진 방향은 첫 번째로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지산학협의회, 산학협력단장협의회로 하여 부산시와 교육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전담 부서로는 지산학협력과를 수행기관으로는 지산학협력센터를 설치하였고, 추후 ‘부산고등교육협회’ 구성을 계획하며 지산학협력 브랜치를 지정하고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산학 협력을 확산하고 있음. 두 번째로 기업에 힘이 되는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하여 대학이 기업과 기술공동개발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하여 기업의 애로점을 협력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기술을 조사 및 매칭하여 기술이전을 활성화시켜 대학 보유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과 투자 확대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세 번째로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 차원에서 대학에서 이론학습을 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중심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워털루형 코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도체, 블록체인 등 미래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디지털 맞춤형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네 번째로 미래 대응하는 대학혁신 유도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대학 내 기업

연구소를 산학협력클러스터에 조성하며,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혁신전략으로 대학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도 국비뿐 아니라 지자체(시)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대학이 단순히 특정 대학의 발전을 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 방향의 설계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부산시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음.

지산학 협력 도시인 부산에서의 ‘대학-지자체 협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이 지역 산업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달성하는 이른바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모델을 기초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 모델은 지산학의 실천적 협력 모델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음. Triple Helix 모델은 산업, 정부, 대학이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의 활용 및 이전으로 혁신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이며, 각 주체가 서로 다른 본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고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얽혀 새로운 관계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가게 되고,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식생산 주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학은 산업, 정부, 대학 세 가지 주체 중 지식을 생성하고 기술을 이전하여 기업이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간주되고 있음.

정부가 추진 중인 RISE 체계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Triple Helix 모델에 기반한 대학-산업-지자체의 관계 재설정을 요구하는 정책 Initiative라 평가할 수 있으며, 그동안 대학지원에서 ‘지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대학과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부의 대학지원정책에서 ‘지자체를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학술적으로 종래의 Triple Helix 모델은 융합적 지식 창출이 중요해지고 본격적인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적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를 맞아 더욱 고차원적으로 진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Carayannis, Barth, Campbell(2012)은 종래의 Quadruple Helix 모델(Carayannis & Campbell, 2009)에서 한 발 더 진화한 Quintuple Helix 모델을 제시하여, 정부 내에서 지식생산을 위한 사회 각 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험의 교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하였음. Quintuple Helix 모델은 다섯 가지 하위시스템으로 교육, 경제, 자연환경, 미디어와 문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Triple Helix 모델이든 Quadruple Helix 모델이든 Quintuple Helix 모델이든, 이 모델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의 핵심 주체는 공통으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이 전통적 산학협력을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을 넘어 지식의 혁신, 사회적 혁신, 문화 및 정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대학이 지산학 협조체제에서 지식의 생산, 활용, 이전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위주의 공모 지원 등의 선택적 지원보다는 합리적인 지원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특성에 따른 지원, 대학의 규모(대형대학, 중소형대학)에 따른 지원 등 대학 재정 지원 시 대학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부산의 경우 산학협력단장협의회를 대학 간 협의의 주체로 하였다면, 정부 재정지원이 RISE로 통합되므로 정부의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총장단(급)의 대학 간 협의체가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자체 내에서도 대학 간 수평적 협력이 중요

하듯이 지자체의 협력에서도 지방자치에 따른 지자체(시/구)와 의회(시/구) 간 지속적인 협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대학-지자체 간 협의제도 합리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지산학 모델은 협의체의 조력자의 역할에서 산학협력의 중심 역할까지 수행하고자 했으므로, 부산의 대학-지자체 협력 모델은 기업, 대학이 협력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상생발전 생태계로 전국의 지자체 선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I. 비수도권지역 RISE 사업 이슈

1.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학문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공동체의 관심 필요

- ‘대학’을 뜻하는 영단어 ‘유니버시티’(university) 어원은 라틴어 universitas로 ‘종합’, ‘전체’를 의미하며, 대학을 뜻하는 시기는 중세시대로 universitas는 여러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
- 최초의 대학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볼로냐대(1088년 설립)가 학자들과 학생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대학은 인류 역사에서 1000년간 이어져온 학문 공동체임
- 대학 교육이 기술과 기능, 취업, 산업 위주의 실용 학문만을 육성하는 데 치우치면서 기초·보호학문 분야가 소외되고 있으며, 기초·보호학문 분야에 대한 진학 수요 및 학과 유지 비율 감소 추세
- 2022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2~2020년 국내 대학의 인문학 학과는 매년 19개씩 사라짐
 - 비수도권의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며 비수도권에서 철학과를 유지한 대학은 9개 거점 국립대 외에 일부 대학에만 유지
 - 거점국립대학의 역할로 맡겨두기에는 기초·보호학문이 전체학문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 공학계열 중심의 학과 구조조정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초·순수 학문 전공 학과의 입학 정원이 대폭 감소*(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 * 인문계열 학과수·입학정원 증감 : (‘12) 976학과 46,108명 → (‘20) 828학과 37,352명
- 2022년 UN은 ‘세계 기초과학의 해’를 선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지구적 난제 해결과 기술개발의 원천으로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 2000년대 이후 지방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을 폐지한 곳은 29개가 되며, 남아 있는 대학도 상당수가 실용학문과의 결합을 통해 변형된 형태로 존재
 - RISE 체제 안에서 지역 주력산업 이외의 학문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축소가 우려되고, 이는 지방대학에서의 기초과학 위축 가속화 우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40년대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200여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사라지는 대학 대부분은 지방대학일 것으로 예상
-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학문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대학 간 벽을 넘어선 **기초·보호학문 분야 개방형 학사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운영 및 확산 필요**
-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등 학문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RISE 체제에 포함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2.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 RISE 사업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 공약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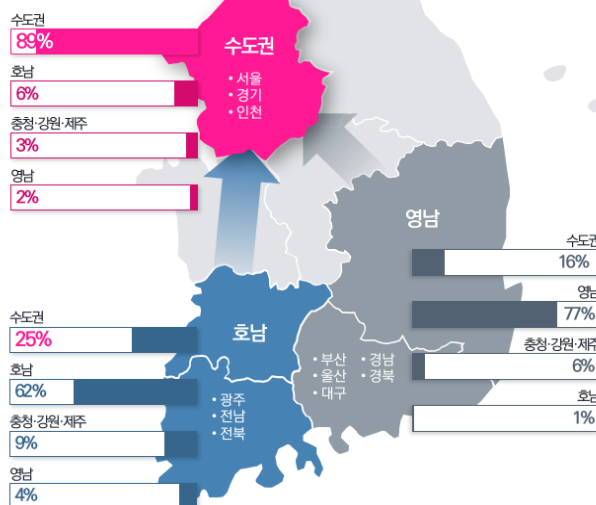
〈주요 지표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 차이〉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면적('21년)	12.1%	87.9%	1,000대기업수('20년)	86.9%	13.1%
인구('21년)	50.3%	49.7%	GRDP('20년)	52.5%	47.5%
청년(20~39세)	55.0%	45.0%	1인당 GRDP('20년)	37.1백만원	34.1백만원
취업자수('21년)	50.5%	49.5%	신용카드 개인사용액('21년)	75.6%	24.4%
사업체수('19년)	47.0%	53.0%	주택매매가격(중위단위값)('22년 6월)	6,460천원	2,142천원

출처 :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방향(2022년, 산업연구원)

- 역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향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 격차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모습
 - 수도권의 총인구와 GRDP 규모는 비수도권을 추월하였으며, 특화산업의 위기가 지역 위기로 연계되는 산업적 구조의 문제도 포함
- RISE 사업은 지방대학의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인재가 지방에 정착하고 이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는데 맞춰져 있음
- 그러나,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낙후된 지역 인프라로 인해 지방대학의 연구·교육여건도 열악한 실정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대졸 취업자 이동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호남권 25%가 이동
- 비수도권 지역의 RISE 사업은 미래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기획이 필요

대졸 취업자
지역 이동 현황



출처: 최기성, 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11월호

수도권이 가진
청년 유인 환경

좋은 일자리
및 근로조건

높은
삶의 질

잠재능력
계발

기업
집적화

3. 대학 경쟁력의 지자체 의존도 심화

□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 상이

- RISE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 및 역량 상이**
 - RISE 사업 시범지역 선정 평가에서 조직역량*에 100점 만점 중 50점 배정 등 지자체의 대학 전담조직 역량(대학 육성과 연계사업 추진 등)이 중요
 - * 조직역량 : 대학지원 전담조직과 인력구성의 적정성, 비영리법인 지정 운영의 적정성, 지자체와 대학지원 재원 확보의 적정성('23년 RISE 시범사업 평가 기준)
- 지자체별 **고등교육 수요(대학 수 등) 차이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 부담 차이**가 지역대학의 경쟁력 차이로 직결
- 지자체장 선거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지속성 유지의 어려움**

□ 대학에 관한 행정·재정 권한 위임에 따른 평가 부담 가중

- 지자체는 행정기관으로서 지역대학의 학생을 지역주민으로 범주화하고, 대학지원 소관 부서의 역할은 지역대학의 예산·재정 지원 중심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
 - 지자체의 대학 지원예산은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방식으로 지원
 -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지자체별 대학지원 재정 규모 상이**
 - *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 45.3%
 - ※ 하위 4개 지역(경북25.6%, 강원24.7%, 전남24.2%, 전북23.8%) 평균 재정자립도는 24.5%
- RISE 체제의 지속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국고 지원 확대 필요**

4. 지역 대학-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 및 종합대책 수립

□ 지역 및 지역 대학 특성을 고려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 협력 운영체제의 독립성·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지자체와의 수평적·상시적 소통시스템 마련

□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한 종합대책 수립

- RISE 체제의 목적은 '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의 해당 지역 정주 관건
 - 국토연구원의 '지방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사유는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42.0%)임
-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청년층 지역 정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할 경우 RISE 체제는 수도권에 필요한 인재의 공급과 지방소멸로 귀결
 -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율이 2019년 기준, 서울(65.2%), 경기(87.1), 대전(87.2), 울산(88.4), 세종(88.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90%를 상회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필요성’(2022.)]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및 기회발전특구*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 *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시·도지사 신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지정
 - ** 수도권 대상 지역 :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4년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69.8% 수준으로, 대학교육을 의무교육화하여 지원 확대
 - * OECD 평균 \$17,126, 대한민국 \$11,948(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년)
- 열악한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행정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제정 및 개정, 신산업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인프라 확보, 청년 정주를 위한 생활 SOC 및 문화예술 지원

II. 전남지역 RISE 사업 추진상황 및 개선안

1. 전라남도 RISE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 (추진 경과) 전남은 RISE 시범지역 선정 후 대학 및 산업계 인사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RISE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추진한 상황
 - ※ 자문위 구성(‘23. 4.) / 주요 산업분야 수요조사(‘23. 5.) / 신입생 및 졸업생 현황 조사(‘23. 6.)
- (추진 내용) 전남 3개 영역 총 19개 분야*에서 RISE 운영(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역 대학은 각 분야를 중심으로 RISE 참여 방향 협의 중
 - * 주력산업 고도화 영역(6개 분야), 미래전략산업 영역(8개 분야), 대학별 특화영역(5개 분야)

〈전남 RISE 체계 운영(예정) 분야〉

영역	분야
주력산업 고도화	철강, 화학, 조선, 농업·수산, 문화관광·건강·보건·복지, 항만·물류
미래전략산업	에너지신산업(해상풍력), 친환경 고효율 소재부품, 미래형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반도체·레이저, 우주항공,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대학별 특화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귀농·귀촌, 로컬인재육성

- (대학 현황)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21개교(일반대 11개교, 전문대 10개교)
 - 일반대학 11개교(정원 32,601명, 재학생 31,595명, 교원 3,152명)
 - 전문대학 10개교(정원 17,874명, 재학생 16,178명, 교원 1,535명)
- (RISE 지원 조직) 전라남도 대학 지원은 2개 조직(자치행정국, 전략산업국)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확대 개편하여 RISE지원팀 신설
 - 현행 1사무처 3팀(기획운영팀, 인재육성팀, 평생교육팀) ⇒ 1사무처 4팀(RISE지원팀 신설)

조직		팀명	근무인원	담당업무
현행	자치 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교육지원팀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지방대 권한이양 대응 전남도립대 운영 지원 등
	전략 산업국	연구바이오산업과 연구개발사업팀	2명 (5급 1명, 6급 1명)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 추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추진 산학연관 협력체계구축 추진 등
향후	자치 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기존) 인재육성팀 (기존) 청소년지원팀 (확대) 교육협력팀 (신설) 대학협력팀	교육행정팀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전남도립대 운영지원 교육부 교육자유특구 대응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대학협력팀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대 권한 이양 대응 RISE 법인 설립 및 운영관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추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추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추진 글로벌대학육성 등 교육부 공모사업 대응 등

※ 조직개편은 2023. 6.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시 7월 1일자로 시행

2. RISE 체계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

- (지역 특성 고려) 지역 이원화 캠퍼스 대학(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제, 초광역권 지자체-대학 간 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문제 등 지자체별 캠퍼스 특성을 고려한 RISE 체계 마련
- (추가 재정 확보) 정부는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기존 사업의 일몰과 통합으로 RISE 재원을 마련 및 단순 재배정하는 것을 넘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 추가 확보 필요
- (제도적 장치 마련) RISE 체계의 필수 성공 요건인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지자체가 대학을 단순 인력 양성소가 아닌 지역혁신의 동반자로 존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3. 전남 RISE 체계 도입 개선(안)

- (초광역 RISE) 복수형 RIS 사업의 성과 존속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협의체 중심의 초광역 협력형 RISE 체계* 운영
- (REIS 체계) 지역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교육이 아닌, 지역교육 혁신 그 자체를 지역의 혁신으로 인정하는 지역혁신의 인식 패러다임 전환형 REIS* 체계 도입

* Regional Education Innovation System(기존: RIS+Education)

※ 지역혁신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으로 전환

I. 지역과 대학의 위기, 담대한 혁신 필요성 공감

-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혁신의 거점이 바로 지역대학임.
- 대학이 스스로 과감히 혁신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산업발전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라이즈(RISE)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함

II. 시도 지자체-대학 적극 교류 및 협력 필요

- 라이즈(RISE)체계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대학지원방식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 지역 주도의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 및 인력 정비와 함께 대학과 적극 교류 및 협력하려는 의지가 중요함
- 현재 지자체 별 대학지원 전담부서 및 지원인력 규모가 매우 상이한 상황으로 지자체 의지·역전에 따라 지역대학 간 격차 발생이 예상됨
 - '23.3월 기준 비수도권 17개 시도 중 9개가 대학지원 전담부서가 전무, RISE 체계 이후 긴급히 전담인력이 배치(보충)된 경우 대학지원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 부족 우려
 - ※ 출처: RISE사업 시범지역선정 준비에서 이미 '선별적 구제'우려 나타나(U's Line, 2023.3.9.)
 - 결국, 지자체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라는 강한 인식과 대학행정 및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광역지자체의 지역대학 전담부서 유무

지역	대학전담 부서	지원인력	전담조직 신설 여부
대전	×	5명	검토
충남	○	4명	기 운영중
충북	○	3명	향후 상황에 따라 검토
세종	○	2명	향후 상황에 따라 검토
대구	×	5명	신설 계획중
경북	○	7명	향후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울산	×	12명	향후 상황에 따라 검토
경남	○	16명	기 운영중
부산	○	24명	기 운영중
전북	○	3명	기 운영중
광주	○	5명	계획있음
전남	×	1명	계획있음
강원	×	0명	신설 계획중
제주	×	2명	사업추진시 검토 예정

※ 출처: RISE사업 시범지역선정 준비에서 이미 '선별적 구제'우려 나타나(U's Line, 2023.3.9.)

- 또한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해소 및 교류를 위한 규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 Top-Down방식의 선도적 규제 개혁이 필요함

* 지자체와 국립대학 간 인사교류, 행정공유 등에서 법적 한계 존재(국립대학에서 지자체 인사파견 시 교육부 승인이 필요, 유연한 인사교류 한계)

Ⅲ. 국립대학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안정적 재정확보 우려

-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국립대학 육성 정책이 필요함. 국가가 대학이 자율적 질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함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76.1%인데 비해 광역시는 40~50%대(부산 49.2%)이며, 비광역시는 강원지역 25.8%, 전남지역 23.3%, 경북지역 27.1% 등 20~30%대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대학예산지원 권한 확대는 국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책무를 지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데, 대학의 역할 수행 평가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
 - 라이즈(RISE)체계 하에서도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부가 국립대학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Ⅳ. 지역산업 및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와 라이즈(RISE)체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기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역에서 길러낸 우수인재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 이동하므로 결국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우수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음.
 - 정부(중앙, 지방)와 기업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면 대학은 지역의 여건과 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의 책임을 지고 그 일자리에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기업체 대부분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대학 위기를 가속화시킴

※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정부투자기관의 89%, 전국 20대 대학의 80%,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구조적 문제 존재.

- 정부의 우수기업 유치 및 지역소재 기업 육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자체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라는 인식 하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적극적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한편,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기업의 지역 이탈이 상호 악순환 구조임. 그러므로 현재 지역 인재 유출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혁신도시법)’를 개선 확충하여 지역인재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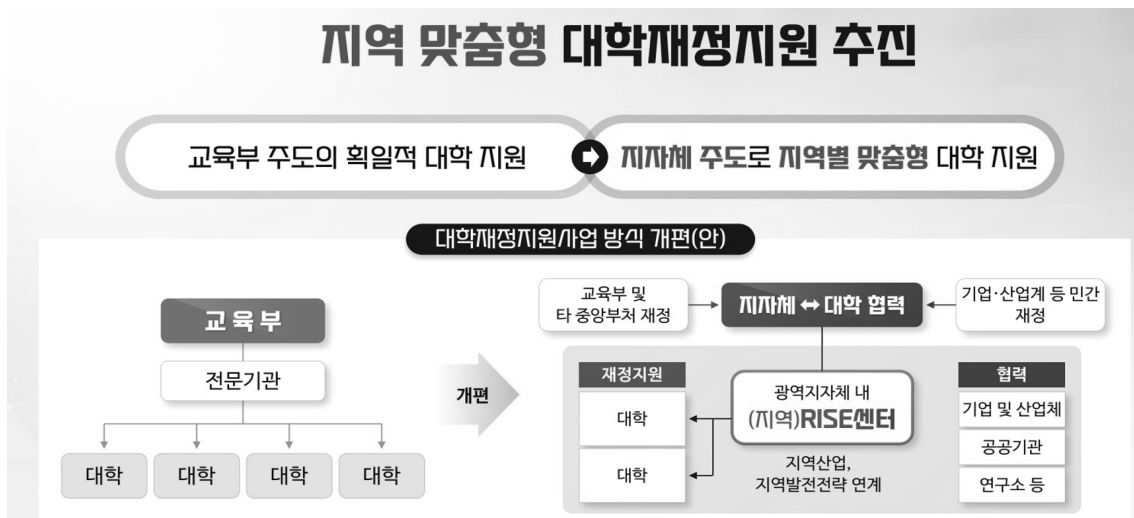
V. 국립대학 RISE사업의 추진상황

- 현재 라이즈(RISE)체계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지역은 반드시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기관으로 라이즈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
- 부산의 경우 라이즈(RISE) 시범지역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RIS, '23 신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플랫폼은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에 두어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추진
 - ※ 지역혁신플랫폼(RIS)의 사업기획·사업비 배분·성과관리 등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 신규 플랫폼의 변경된 운영방식은 이전 사례가 없어 최적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사립대학에 비해 많아 지자체와의 원활한 교류·소통에 한계가 있음
 - 아직 지자체와 지역대학은 원활한 라이즈(RISE)체계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RISE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구축을 위하여 교육부 및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또한, 현재 라이즈(RISE) 체계는 단일 광역시·도 단위로 구축되어 있어 지역의 대학이 복수의 지자체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세부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체계 구축 및 운영방법의 개선도 필요함

I.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개요

1. RISE 체계와 기존 교육부 사업 개요

-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체계)는, 기존의 지방대학혁신역량사업(일명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누리사업)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 다만, 누리사업의 경우 지역을 위해 특성화해야 하는 분야를 대학이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RISE 체계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대학들이 개별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진단,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특성화 분야 중에서 선택적인 특성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며, 향후 RISE 체계는 우선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지역의 주요 기관들로 구성된 RISE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RISE 체계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될 것이다.



II. 충북지역 RISE 추진사항

1. 충북지역 10대 전략산업 분야 및 시범지역 선정

- 충북지역의 경우, “국가 『新성장 4.0 전략』의 핵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위의 3가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더해 “전략적 투자 및 선점이 요구되는 미래선도

산업 분야” 7개 사업(ICT융합, 태양광, 소부장, CCU, 첨단농업, 순환경제, 모빌리티)을 추가하여 “10대 연구개발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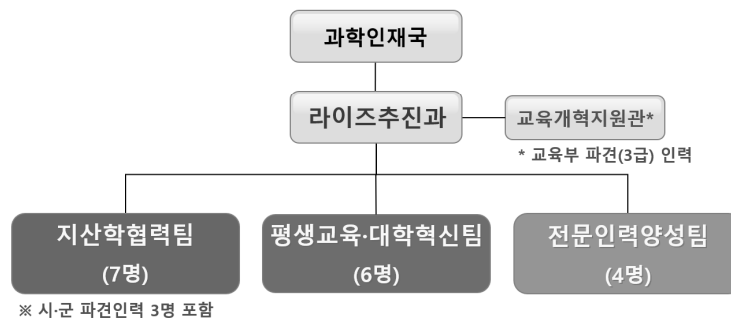
- 그리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특성화를 시도하겠다는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과 함께 2023년 3월, 7개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 충북지역 RISE 체계 추진사항 및 우려 사항

- RISE 시범지역 선정 이후, 충북도는 대학협력팀의 주도하에 도내의 대학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현재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향후 계획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과학인재국 산하 ‘라이즈추진과’ 신설(7.1.)

■ 3팀 17명(과장 1, 팀장 3, 팀원 13)



-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립대학은 지자체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과 자체 지원금을 지역대학에 어떤 목적의 사업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을 느끼고 있다.
- 이러한 우려는 뚜렷한 일정계획, 지역 기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계획서 등 평가용 보고서의 정확한 집필 방식과 이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미흡함에서 기인하며, 또한 고등교육과 대학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RISE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RISE 체계의 일환으로 시작된 글로벌 대학 시범 선정에서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대학-한국교통대학 컨소시엄이 예비 선정되어, RISE가 원래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국립대학 중심으로 지역대학을 개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 어려운 지역 균형발전을 대학과 지역이 교육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RISE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과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지역대학은 느낄 수도 있다.

- 현재 RISE 체계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다양한 사업(RIS, LINC 3.0, LiFE, HiVE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타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RISE 체계로 전환되도록 협의할 것으로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 이러한 RISE 체계가 지향하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은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성과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 내용이 여전히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따라서 대학별로 향후 RISE 체계가 지향하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학사 구조 조정, 교육과정 개혁 등을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과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7조와 제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목적 달성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특히 최근 개정된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오는 7월 10일부터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을 포함하도록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 고등교육법의 재원지원 기본계획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2025년에는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도 RISE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RISE 체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IV.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 글로컬 대학, 일반재정지원 교육 혁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등은 일률적으로 지역 혁신의 중심에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역할 중 강조되고 있는 사항은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방의 인구 급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과 대학의 현실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RISE 체계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된다면 RISE 체계의 최초 목적인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의 총장협의회 등이 RISE 체계 하의 주요 사업의 계획, 평가, 운영진단 등 핵심 업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 취·창업, 지역 정주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RISE 사업의 구체적인 체계와 지역대학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방식으로 RISE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대학들이 과연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분명한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다.
-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 선정의 경우도 전체 15개 선발 대학 중, 국립대학이 8개교, 사립

대학이 7개교인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약 80%에 해당하는 사립대학의 비중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또한 현재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1,900억 중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이미 분배된 1,140억을 제외한 760억 원이 이번에 선정될 지방 사립대학의 글로벌대학 사업비로 지원된다면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지방 사립대학에 지방대 활성화 예산에서 50억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음) 미선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은 결국 지방 인구감소에 있고,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입학자원 감소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023년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을 23년 만에 풀어서 수도권 일반대학 정원이 예년 대비 817명 증가하였다. 일부 지방대학도 증원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거점 국립대학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감축 유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주요 대학 모집인원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결국 지방대학들에 고스란히 전가되어왔다.
-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2012년 84,578명에서 2022년 87,072명으로 2,494명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며, 이 중 정원 외 선발은 1,933명, 정원 내 선발은 561명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2012년(283,722명)에서 2022년 269,715명으로 33,304명 줄었고, 실제 수도권과 지방의 신입생 총원율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 RISE 체계의 도입 취지가 지역 균형발전에 있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구와 대학 입학정원 문제 해결로 귀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의 과감한 입학정원 감축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EMO

MEMO

MEMO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II

대학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박 구 병 이사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MEMO

MEMO

MEMO

MEMO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발 행 일 : 2023년 6월

발 행 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 소 :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전 화 : 02) 6919-3800

홈페이지 : <http://www.kcue.or.kr>

인 쇄 처 : 경성문화사 (02) 2090-1151(代)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9 791166 962417
ISBN 979-11-6696-241-7

비매품/무료

93370